

 재정경제부	보도참고자료		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
	보도일시	배포 즉시	
생 산 일	2007.4.25(수)	생산부서	정책조정국 부동산정책팀
담당팀장	최지영(2150-2270)	담 당 자	김의중(2150-2271)

제목 : 임대주택법 개정 및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관련

- '07.4.25(수) 중앙일보 「정부, 법 개정안 통과 안돼도 은행돈 빌려 추진」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
-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금년 중 계획된 5천호의 시범사업을 Project Financing을 통해 강행하여 정치권과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 바,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.
- 공공주택 비축물량의 확대를 통한 서민·중산층 주거복지 향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「1.31 대책」을 통해 정부는 중형급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산층 대상의 주택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약속하였음.
-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서 만약 정부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동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우려가 있음
- 만약 임대주택법이 하반기에 개정되고,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금년 중 추진이 어려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

-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의 Contingency Plan으로서 금년 중 계획된 시범사업 5천호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,
-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Project Financing(PF)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.
- PF를 통한 주택건설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현재의 제도적 범위내(공공임대)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의 형식을 원용하는 것임.
- 다만, PF를 통한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은 '08년 이후 연간 5만호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
-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차원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음.